

별 첨

자본시장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성과 - 증권업 분야 -

2019. 8.

금 융 위 원 회

I. 추진배경

□ 국무조정실 총괄하에 **쏠 정부적으로 규제입증책임제**를 실시

- 정부(담당공무원)가 **규제의 존치 필요성**을 입증하고 입증에 실패하면 규제를 폐지·완화하도록 **패러다임을 전면 전환**

※ **대통령 주재 기업인과의 대화(19.1.15) 건의사항**

- ▶ “기업이 규제를 왜 풀어야 하는지 호소하고 입증하는 현재의 방식보다는, 공무원이 규제를 왜 유지해야 하는지 입증케 하고, 입증에 실패하면 자동 폐기토록 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”

- 경제계·기업의 규제개선 건의과제와 행정규칙*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

* 향후 법률, 시행령 등 법령 전반으로 확대할 예정

□ 금융위는 5.3일 「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」를 개최하여, 향후 총 1,100여건에 달하는 명시적·비명시적 규제에 대해 입증 책임을 전환하여 전수 점검·개선할 계획임을 발표

☞ 금융위원회 '19.5.7일 보도자료(「금융규제혁신 통합 추진회의」 개최) 참고

- 국조실에 등록된 금융위 소관 명시적 규제(총 789건)의 경우 ‘금융위 기존규제정비위원회’를 통해 ‘20년말까지 전수 조사·정비할 계획

* 금융위 부위원장이 위원장이며 15인으로 구성, 규제·금융정책 전문가, 경제계 추천 인사 등 민간위원이 과반수(9명)

- 보험분야는 총 98건*의 규제를 점검하여 이중 23건을 개선하기로 함('19.5월)

* (기본대상) 국조실 등록규제 92건중 중복 등록된 5건을 제외한 규제 87건
(추가대상) 등록규제는 아니나, 업계 건의 등이 있었던 보험업 감독규정상 규제 11건

- 자본시장분야는 금년 초부터 국조실에 등록된 규제 총 330건을 중심으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검토 중

II. 자본시장분야 추진경과

- (추진대상) 국조실에 등록된 자본시장 관련 규제(330건)를 기본 대상으로 하되, 업계의 개선 건의가 있는 규제도 함께 검토

< 자본시장분야 등록 규제 현황 >

- * ①금융투자업규정(193개), ②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(58개), ③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(17개), ④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감독규정(11개), ⑤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지침(2개), ⑥퇴직연금감독규정(16개), ⑦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(26개), ⑧단기매매차익 반환 및 불공정거래 조사·신고 등에 관한 규정(6개), ⑨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(1개) 등 총 330건

- (추진방식)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자본시장부문 규제를 4개 분야로 구분하고 '19년 말까지 총 4회의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의

- '19.8월 증권업 분야*, 9월 자산운용업 분야, 10월 회계·공시 분야, 11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** 순으로 검토·심의할 예정

* 금융투자업규정 중 투자매매·중개업 관련 규제

** 금융투자업 관계기관, 증권 발행 제도 등

- (추진경과) 업계 의견수렴, 기존규제정비위원회 민간위원 의견 수렴, 전체회의 개최 등을 통해 증권업 분야 86개 규제를 우선 심의

- (6월까지) 국조실 일몰규제 검토 T/F, 금융위 옴부즈만,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

- 협회·금감원 등과의 논의를 통해 증권회사의 건전성 및 시장 질서 유지,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해 존치가 필요한 규제를 선별(58건)

- 증권회사의 영업활동에 대한 규제는 심층 과제(28건)로 분류하여 규제수준의 적정성, 개선방안 등을 집중 논의

- 특히, '18.11월 발표한 「자본시장 혁신과제」 관련 세부 추진 방안 마련을 위해 과제별 T/F 등을 통해 심도있는 검토 진행

*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('19.1월), 차이니즈월 규제 개선방안('19.5월),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('19.6월) 등 발표

- (7~8월) 업계의견 추가 수렴 및 기존규제정비위원회 민간위원 의견을 수렴하고, 전체회의(8.23일)를 통해 개선과제를 최종 심의·결정

Ⅲ. 추진성과

1

심의결과 개요

- (개선율) 총 86건의 규제(미등록 6건 포함)를 선행심의*(58건) 및 심층심의(28건) 대상으로 구분하고, 심층심의 대상 28건 중 19건(67.9%)을 개선

* 용어의 정의 조항, 제재 근거 조항,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, 재무건전성 규제 등 필수규제

< 심의결과 요약 >

대상규제	⇒	선행 심의	⇒	심층 심의	개선(A)	존치(B)	개선율(=A/[A+B])
86건		58건		28건	19건	9건	67.9%

- (유형별) 인가·등록, 신용공여, 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회사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의 개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

- 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관리 및 시장질서 유지 관련 규제는 존치 비중이 높음

< 규제 유형별 심의결과 >

구분	대상 규제	선행 심의	심층 심의		
			개선 (A)	존치 (B)	개선율 (=A/[A+B])
금융투자업 인가·등록(진입)	5	0	2	3	40.0%
신용공여(담보비율, 신용공여 한도 등)	14	2	6	6	50.0%
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통 영업행위 규제 (정보교류 차단, 투자권유 방법, 불건전 영업행위, 전문투자자의 기준 등)	21	16	5	0	100%
장외거래(채권의 장외거래, 환매조건부매매 등)	29	23	6	0	100%
금융투자회사의 건전성 관리 및 시장질서 유지 (합병·해산 등 주요사항 보고, 재무건전성 유지, 경영실태평가 및 적기시정조치 등)	17	17	0	0	0%
합계	86	58	19	9	67.9%

①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

○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합리화 (금융투자업규정 제2-6조)

- (현행) 금융투자업 인가심사시 적용되는 엄격한 인적·물적 요건, 대주주요건 등으로 인해 원활한 신규 진입이 저해되는 측면
- (개선) 「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」(‘19.6.25)에 따라 신규 진입을 활성화 하는 방향으로 인가요건을 완화

*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경력기간 요건을 완화(3~5년→1~3년 경력자), 인가 자진폐지 이후 재진입 경과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

< 「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」 주요 내용 >

- (인가정책 정비) 동일 그룹내 1개 증권사, 1개 자산운용사 설립만을 허용한 인가정책을 폐지하여 그룹내 신설·분사·인수를 자유롭게 허용
- (자본금 요건 완화) 금융투자업 인가시 요구되는 필요자기자본을 현행보다 1/2 수준으로 완화(예 : 증권 전체에 대한 투자매매업 500억원→250억원)
- (업무추가 요건 완화) 시장에 진입한 증권사가 취급 상품만 확대하는 경우에는 변경 인가가 아닌 등록으로 업무 추가를 허용
- (심사관행 개선) 신규 및 변경인가·등록 심사시 최대 심사중단 기간(6개월)을 운영(예 : 공정위·국세청 등의조사 착수 후 6개월 이내 검찰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심사 재개)

○ 정보교류 차단(차이니즈월) 규제를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 (금융투자업규정 제4-6조·제4-7조)

- (현행) 정보교류 차단의 규제 대상과 방식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어 금융투자업자의 영업 자율성을 제약
- (개선) 「차이니즈월 규제 개선방안」(‘19.5.27)에 따라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·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

< 「차이니즈월 규제 개선방안」 주요 내용 >

- (차이니즈월 설치대상 전환) “금융투자업 단위” 칸막이 규제를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“정보 단위”별 규제로 전환
- (규제방식 전환) 법령에서 임직원 겸직제한 등 인적교류 금지, 사무 공간 분리 등 물리적 차단 의무 등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원칙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만 규정하는 방식으로 개선
- (사후규제 강화) 차이니즈월 관련 주기적 점검 및 교육의무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행위규제를 신설하고, 유통이 제한되는 정보 이용 등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

○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완화 (금융투자업규정 제1-7조의2·제1-8조)

- (현행) 개인이 전문투자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*이 외국에 비해 엄격하여 전문투자자群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

* 투자경험 요건 & 손실감내능력 요건(연소득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) 충족

- (개선) 「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」(‘19.1.21)에 따라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합리적으로 완화(‘19.8.20일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)에 따라 하위규정 정비, 11.21일 시행)

* 손실감내능력 요건 완화(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[부부합산시 1.5억원] 또는 순자산 5억원[거주주택 제외] 이상),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 요건 신설 등

< 「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」 주요 내용 >

- (투자경험 요건) 초저위험 상품(국공채, RP 등)을 제외하고 월말평균잔고 기준 5천만원 이상을 보유하도록 완화(기존 : 신청시점 기준 잔고 5억원 이상)
- (손실감내능력 요건)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(부부합산시 1.5억원) 또는 순자산 5억원(거주주택 제외, 부부합산 가능) 이상으로 완화(기존 :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또는 총자산 10억원 이상)
- (금융 전문지식보유자 요건 신설)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*인 경우 투자경험 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
 - * 국가 공인자격증 보유자(회계사, 변호사, 변리사 등), 금융투자업 직무 종사자, 전문자격증(투자권유자문, 투자운용, 금투상품분석) 보유자
- (인정절차 간소화) 금융투자협회 등록절차를 폐지하고, 금융투자회사가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심사 후 인정

2 신용공여 업무 관련

- 투자매매·중개업자가 신용공여*시 투자자에게 징구해야 할 담보비율을 차등화 (금융투자업규정 제4-25조)

* 신용거래용자, 신용거래대주, 예탁증권담보용자, 청약자금대출

- (현행) 투자자에게 신용공여시 담보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140% 이상의 담보를 유지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제

* 신용도가 높고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은 채권 등에 대해서도 140% 이상의 담보 유지비율을 적용하여 투자자 권익이 과도하게 제한되는 측면

- (개선) 획일적인 담보비율 산정방식은 폐지하고, 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, 증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담보물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

- 투자자의 담보물 처분시 채무변제 순서의 경직성 완화 (금융투자업규정 제4-28조)

- (현행) 담보물 처분을 통한 채무변제 순서를 일률적으로 규정*함에 따라 투자자의 선택권이 제한되고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우려

* 처분제비용 → 연체이자 → 이자 → 채무원금

- (개선)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이자(연체이자 포함)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

-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의 투명성 제고 (금융투자업규정 제4-31조)

- (현행) 투자매매·중개업자가 정하는 신용공여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의 산정기준이 불투명

* '19.8.23일 기준 신용거래용자 이자율은 4.0~11.0% 수준

- (개선) 조달금리, 신용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및 공시근거 마련

- 신용공여 업무 관련 금융당국의 비상조치 적용 대상 한정 (금융투자업규정 제4-33조)
 - (현행) 신용공여 상황의 급격한 변동,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모든 투자매매·중개업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*를 규정
 - * 투자매매·중개업자별 총 신용공여 한도의 변경, 신용거래 종목별 한도의 설정, 징구할 수 있는 담보의 제한 등
 - (개선)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시장상황에서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*
 - * (예) 종합금융투자회사 및 자기자본 대비 신용공여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 (예 : 자기자본의 50% 이상)인 투자매매·중개업자

3 기타 개선사항

-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 추가 신설 관련 신고서 작성 부담 완화 (금융투자업규정 제2-10조)
 - (현행)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 지점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7일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
 - (개선) 신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사항*은 신고서에 중복적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신고서 작성 부담을 완화
 - * 지점등의 인력과 전산설비 등의 물적 설비에 관한 사항, 지점등의 이해상충 방지체계에 관한 사항
- 투자광고의 내용·방법별 심사제도 차등화 (금융투자업규정 제4-12조)
 - (현행)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의 사전확인을 거친 후 투자광고 계획신고서와 투자광고안을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도록 규제
 - (개선) 투자광고의 내용·방법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심사방법을 마련*할 수 있도록 완화
 - * (예) 광고 중요도나 파급력이 낮은 일부 광고물(회사 이미지 광고, 전문투자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등)의 경우 회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만으로 광고할 수 있도록 완화

IV. 향후 계획

□ 자본시장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

- 금번 전체회의를 통해 확정된 개선과제(19건)는 원칙적으로 '19.12월말까지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
 - 다만,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*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히 감독규정 개정 추진
- * (예) 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 차단 규제 개선 등
- 여타 자본시장 관련 규제(등록규제 250건 등)는 '19.9월 자산운용업 분야, 10월 회계·공시 분야, 11월 자본시장 인프라 분야 순으로 검토·심의
 - 업계 등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여 증권업 분야의 추가 개선 필요과제도 함께 검토

□ 금융위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일정

- '20년말까지 금융위 소관 규제사무(국조실 등록규제 기준 789건)를 전수 점검·정비

검토시기	~'19.5월	'19.6~12월	'20년 상반기		'20년 하반기			합계
구분	보험	자본시장	금융산업 (보험제외)	전자금융/ 신용정보	금융 제도	자금 세탁	소비자 보호	
행정규칙	1	9	5	3	8	4	3	33
규제사무 (국조실 등록 기준)	92	330	166	59	60	77	5	789

참고 1

개선과제 목록 (총 19건)

연번	규칙명 <금융투자업 규정>	규제명	규제 내용
07	제2-6조	금융투자업 인가 심사 기준	<p>기존 금융투자업 인가심사 시 적용되는 인적·물적 요건(별표2), 대주주요건(별표3) 등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규정</p> <p>개선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경력기간 요건 완화(3~5년 → 1~3년) 등 인가요건 완화</p>
14	제4-6조	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	<p>기존 사내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내용을 규정</p> <p>개선 법령에서는 사내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 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·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</p>
15	제4-7조	사외 정보교류 차단장치	<p>기존 사외 정보교류 차단장치와 관련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구체적 내용을 규정</p> <p>개선 법령에서는 사외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 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·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</p>
28	제2-10조	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지점 추가 신설시 사전 신고 의무	<p>기존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내에 지점 등을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금융당국에 7일전까지 신고서 제출</p> <p>개선 신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사항은 신고서에 중복적으로 기재하지 않도록 하여 신고서 작성 부담을 완화</p>
46	제4-12조	투자광고의 방법 및 절차	<p>기존 금융투자업자가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준법감시인 사전확인 후 협회 심사를 받도록 규제</p> <p>개선 투자광고의 내용·방법별로 특성을 고려하여 합리적 심사방법을 마련할 수 있도록 완화</p>
55	제4-22조	신용공여약정의 체결	<p>기존 투자매매·중개업자가 신용공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신용공여 약정 체결, 본인 확인 실시 및 신용거래계좌 설정 필요</p> <p>개선 신용거래계좌 설정 의무는 신용계좌 설정 보증금 규제 폐지로 실익이 없어 해당 조항 삭제</p>
58	제4-25조	신용공여 담보비율	<p>기존 투자자에게 신용공여시 담보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140% 이상의 담보를 유지하도록 규제</p> <p>개선 획일적인 담보비율 산정방식은 폐지하고, 담보물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등 합리적 기준 마련</p>

연번	규칙명 <금융투자업 규정>	규제명	규제 내용
60	제4-27조	담보평가의 특례	<p>기존 권리발생이 확정된 증권(무상증자시 신주 등)을 담보로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당해 권리를 담보로 인정</p> <p>개선 권리발생이 확정되었으나 입고되지 않은 주식 배당 신주도 담보증권으로 인정</p>
61	제4-28조	임의상환 방법	<p>기존 담보물 처분을 통한 채무변제 순서를 일률적으로 규정(처분제비용→연체이자→이자→채무원금)</p> <p>개선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이자(연체이자 포함)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</p>
64	제4-31조	신용공여 한도 및 보고	<p>기존 투자매매·중개업자가 투자자별 신용공여한도, 신용공여 기간, 신용공여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등을 정하도록 함</p> <p>개선 조달금리, 신용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및 공시근거 마련</p>
66	제4-33조	신용공여 관련 조치	<p>기존 신용공여 상황의 급격한 변동,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위가 모든 투자매매·중개업자의 신용공여 업무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규정</p> <p>개선 금융회사의 영업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반적인 시장상황에서 조치할 수 있는 대상을 한정</p>
98	제5-18조	환매조건부매매 대상 증권	<p>기존 투자매매업자가 일반투자자등과 환매조건부매매를 하는 경우 매매대상이 되는 증권의 범위를 규정</p> <p>개선 해외 국제기구 및 공공기관 발행채권, 국내 우량기업의 외화표시채권 등을 대고객 환매조건부매매 대상 증권에 포함</p>
181	제5-50조의2	거래정보저장소 선정	<p>기존 장외파생상품 거래 관련 정보를 수집·보관·관리하는 기관인 거래정보저장소의 선정 요건 등을 규정</p> <p>개선 거래정보저장소 도입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률 개정 후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</p>
미등록1	제5-50조의3	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	<p>기존 금융투자업자의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 보고 의무 등을 규정</p> <p>개선 거래정보저장소 도입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률 개정 후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</p>

연번	규칙명 <금융투자업 규정>	규제명	규제 내용
미등록2	제5-50조의4	거래정보저장소 업무 규정 마련 근거 등	<p>기존 거래정보저장소의 업무규정 마련 근거 및 정보 제공 대상자 등을 규정</p> <p>개선 거래정보저장소 도입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률 개정 후 관련 규정을 삭제 또는 개정</p>
미등록3	제1-7조의2	전문투자자 기준	<p>기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으로서 소득 요건(본인 소득 1억원) 또는 자산 요건(총자산 10억원)을 규정</p> <p>개선 개인전문투자자의 소득 요건(본인 소득 1억원 또는 부부합산 소득 1.5억원)과 자산 요건(순자산 5억원)을 완화하고 금융전문성 요건을 신설</p>
미등록4	제1-8조	전문투자자 관련 자료 제출	<p>기존 개인전문투자자 요건 관련 자료를 금융투자협회에 제출하여 등록하도록 규정</p> <p>개선 금융투자협회 등록절차를 폐지하고, 금융투자업자가 요건을 심사 후 인정</p>
미등록5	제5-1조	소액채권매매 특례 범위 확대	<p>기존 장외시장, 환매조건부매매, 소매채권매매 등 장외거래와 관련한 용어 정의</p> <p>개선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에 결제가 가능한 소매채권매매의 기준을 액면가액 50억원 미만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변경</p>
미등록6	제5-28조	기업어음증권의 장외 거래에 관한 제한	<p>기존 투자매매·중개업자가 환매조건부 기업어음증권 매매 등 기업어음증권을 매개로 하는 자금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규제</p> <p>개선 투자매매·중개업자의 기관간 환매조건부 기업어음증권 매매 허용</p>

참고 2

준치과제 목록 (총 67건)

연번	규칙명 <금융투자업 규정>	규제명
05	제2-2조	금융투자업 인가 절차
06	제2-5조	인가조건의 부과
08	제2-8조	겸영금융투자업자의 인가 유지 요건 완화
09	제3-1조	금융투자업자의 회계처리 기준
10	제3-6조	재무건전성 관련 용어의 정의
11	제3-8조	대손충당금 등의 적립기준
13	제4-2조	부수업무 등의 공고
16	제4-8조	재권유 금지의 예외
17	제4-9조	투자권유대행인의 등록
18	제5-4조	장외거래 채권의 결제방법
19	제5-5조	채권의 장외 공매도 호가제한
20	제5-6조	채권의 장외거래시 매매약정단가
21	제5-7조	채권의 장외거래 매매수익률호가 산출 및 게시
22	제5-8조	협회의 장외거래정보 공시
29	제2-16조	합병 등 금융위 승인사항 이외 중요한 영업활동에 대한 보고
30	제2-22조	해외지점 등에 관한 내부통제
31	제2-24조	파생상품 영업 및 매매에 관한 내부통제
32	제2-26조	매매주문 처리에 관한 내부통제
34	제3-10조	순자본비율 등 산정의 기본원칙
35	제3-13조	영업용순자본에 가산할 수 있는 후순위차입금의 요건
36	제3-14조	영업용순자본 차감항목
37	제3-25조	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경영실태평가
38	제3-26조	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경영개선권고
39	제3-27조	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경영개선요구
40	제3-28조	금융투자업자에 대한 경영개선명령
41	제3-30조	적기시정조치의 유예
42	제3-66조	금융투자업자의 업무보고서 제출
43	제3-70조	금융투자업자의 경영공시
45	제4-10조	투자권유대행인 행위규제
47	제4-13조	금융투자업 영위 관련 자료의 기록 및 유지
48	제4-14조	장부외거래에 관한 기록 및 유지
49	제4-15조	소유증권의 예탁
50	제4-17조	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자산 범위

연번	규칙명 <금융투자업 규정>	규제명
51	제4-18조	재산상 이익 제공·수령 기준
52	제4-19조	불건전한 인수행위의 금지
54	제4-21조	신용공여 관련 용어의 정의
56	제4-23조	신용공여의 회사별 한도
57	제4-24조	신용공여 관련 담보의 징구
59	제4-26조	신용공여 관련 담보의 평가
63	제4-30조	신용거래 종목의 범위
65	제4-32조	매매주문의 수탁 등 제한
67	제4-34조	신용공여 관련 자료의 제출
68	제4-35조	신용공여 관련 제재조치
69	제4-37조	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
70	제4-39조	의무예치액 산정 및 예치기한
71	제4-45조	재무상태가 부실한 금융투자업자의 투자자예탁금 관리
72	제4-46조	투자자예탁금 이용료
96	제5-10조	채권중개전문회사의 업무기준
97	제5-12조	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의무
99	제5-25조	증권 대차거래 관련 담보의 징구
100	제5-26조	증권 대차거래 관련 증권의 인도
101	제5-27조	증권 대차거래 관련 중개방법
102	제5-31조	해외시장거래 관련 업무기준
103	제5-32조	외화증권의 결제
104	제5-33조	외화증권의 결제일
105	제5-34조	외화증권의 매매성립결과 통지
106	제5-35조	외화증권의 권리행사 관련 통지
107	제5-36조	외화증권 매매 관련 환전 등 업무기준
108	제5-37조	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계좌별 구분관리
109	제5-38조	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의 외국환은행계좌의 지정
110	제5-39조	해외파생상품신용거래 관련 업무기준
111	제5-40조	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자금확인서 발급
112	제5-41조	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 위탁증거금 등의 예탁시한
113	제5-42조	외화증권 투자현황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현황 보고
114	제5-49조	장외파생상품의 매매기준
175	제4-7조의2	적정성의 원칙
179	제4-48조의2	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